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활용 검토… 재개발·재건축 탄력

m-커버스토리

부동산 공급 100일 입법전

용산공원특별법 정거국회 처리 관심
녹지 기능 상실 부지 주택 공급 검토
정비사업 속도 높일 도정부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500세대 이하 인허가 권한 이양 검토

100일 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거국회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7~8일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정거국회 전략을 홍보한다.

여야 의원들은 9월 9~11일, 14일의 나흘에 걸쳐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사회·교육·문화 각 분야별로 중앙부처 수장에게 정부 주요 사업 성과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10월6일에 시작해 10월27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메가특구특별법·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합의 처리 관심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민주당과, 부동산·증시 등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관계자는 정거국회 대비 비공개 의원 워크숍에서 메가 프로젝트 관련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시스

점 추진 입법으로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 ▲인프라 조성을 위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건축법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정거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은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로, 권역별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산업 인프라 등 7개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8월 입사국회에서 여야의 최대 현안이었던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조치 법안들도 정거국회

때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청년 지지 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부동산 공급 확대를 지상과제로 설정한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 중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는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미래 세대를 위해 서

울에 녹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서울시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도시재정비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서울시장에 가진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을 통해야만 실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다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중심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래대응기금 두고 “재정의 저수지” VS “편법의 저수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수정안이 이번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는 팽배하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어 추가 세수를 적립하고, 이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안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서 쓰인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의 저수지’가 아니라 ‘편법 저수지’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배준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는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도 훨씬 임의성이 높다.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여러 해 쓸 수 있고,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 같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위시, 신현송 논문 들어 ‘쏠림’ 경고 한은 21개 점으로 금리 전망 폭 넓혀

잭슨홀서 과도한 정책 신호 위험 지적
2002년 ‘공공 정보 사회적 가치’ 인용
금통위원 7명 각각 금리 전망 3개 제시
3.25% 중간값도 추가인상 약속 아나

케빈 위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중앙은행의 말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거울의 방’ 위험을 경고하면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4년 전 공동 집필한 논문을 인용했다. 한은이 공개한 6개월 뒤 조건부 금리전망의 중간값은 연 3.25%지만, 이를 한 차례 추가인상의 약속이나 최종금리로 받아들이지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위시의 문제 제기와 맞닿는다.

위시는 미래 금리 경로에 관한 신호를 줄이려 하고 한은은 한 명당 세 점을 찍어 전망의 불확실성까지 공개한다. 방식은 다르지만 중앙은행 전망이 확정된 약속처럼 받아들여지는 위험을 낮추려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다.

◆신현송 논문 꺼낸 위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위시 의장은 지난 28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포워드 가이드가 “너무 오래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평생시에는 미래 정책에 관한 소통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지나친 공개와 금리에 대한 존약속이 시장·기업·가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정책결정자의

운신 폭도 좁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위시 의장이 특히 경계한 것은 시장과 중앙은행이 서로를 따라가는 ‘거울의 방’이다. 시장이 연준의 발언에 의존해 자산 가격을 형성하고 연준이 다시 그 가격을 경제 신호로 활용하면 최초의 정보가 왜곡되거나 증폭될 수 있다. 위시는 이 경우 새로운 상황 변화에 눈이 멀고 정책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위시는 이 대목의 각주에서 스티븐 모리스 프린스턴대 교수와 신 총재가 2002년 미국경제리뷰(AER)에 발표한 ‘공공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인용했다. 경제주체들이 자체 정보도 가진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의 공개 신호가 정확해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개 신호가 틀리면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잘못 움직일 위험도 커진다.

◆한은, 21개 점의 의미

한은은 2022년부터 운영해온 금통위원의 조건부 금리전망을 올해 2월 ‘6개월 뒤 위원당 세 점’ 방식으로 개편했다.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이 세 점씩 제시해 총 21개 점을 만든다. 한 위원이 세 점을 같은 금리에 찍거나 여러 금리로 나눠 찍을 수 있어 위원 간 견해 차이뿐 아니라 각위원이 판단하는 전망의 확률분포도 드러난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경북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405
영양 자작나무숲